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믿을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신뢰사회의 기본입니다
Privacy by Trust, Trust by Privacy



Contents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II. 개인정보의 처리

III.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IV.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피해구제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I.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개인정보 보호법 총칙 (1장)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3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파기
- 개인정보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4장)

- 안전조치 의무
 -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 보호책임자 지정, 처리방침 공개
- 유출 시 조치 해야 할 사항
 - 통지 및 신고, 대책 수립 및 시행

권리 보장 및 구제 (5·6·7장)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손해배상 등
- 개인정보 분쟁조정
 - 조정의 신청, 절차 등
- 단체소송
 - 단체소송 대상, 절차 등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영상정보, 지문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름 + 전화번호
이름 + 주소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예시

일반적 정보

- › 이름, 전화번호
- › 주소, 전자우편

통신 위치 정보

- › 통화, IP주소
- › GPS 등

사회적 정보

- › 교육 정보
- › 근로 정보
- › 자격 정보

정신적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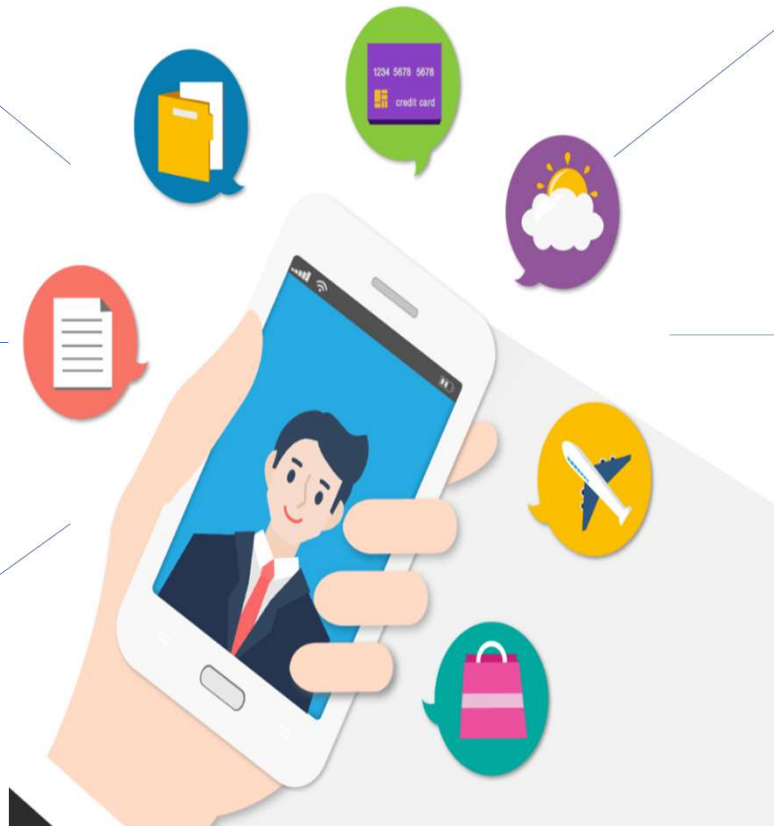
- › 기호, 성향
- › 신념, 사상

신체적 정보

- › 신체정보
- › 의료, 건강정보

재산적 정보

- › 개인 신용정보
- › 부동산, 주식



Q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니까?



A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정 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출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 2016.12)

Q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까?



A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고단17 판결)

(출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 고시 해설, 2016.12)

개인정보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과는 달리 이용자뿐 아니라 임직원, 주주, 협력업체 등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됨

정보주체

-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파일

-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

처리

-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자

-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개인정보 취급자

-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

영상정보 처리기기

-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 4》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 7》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처리
- 8》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사본 발급 포함)
-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일반법

- »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
- »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법인, 단체, 개인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
 -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 등



**Q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A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등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분쟁 조정, 단체소송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참 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즉 고객이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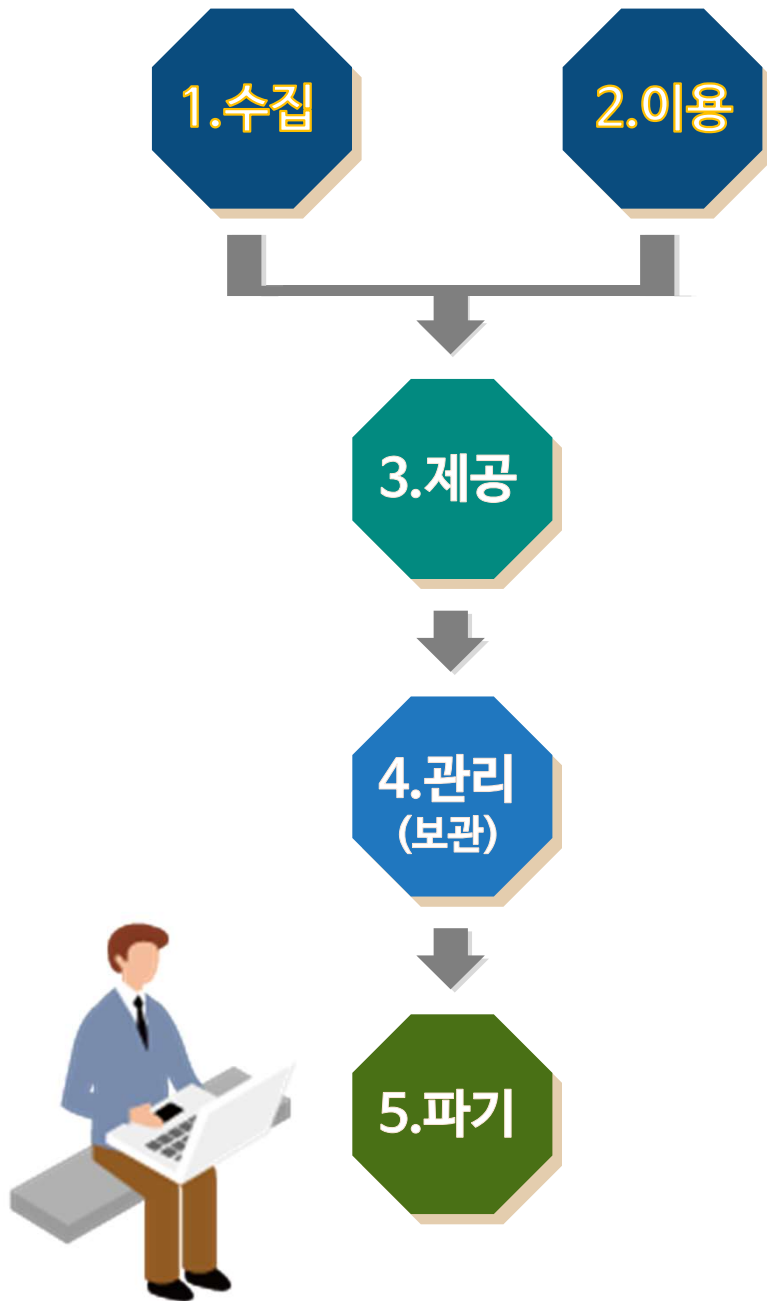
「신용정보법」은 금융기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함

II.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수집·이용 (15조)

최소 수집 (16조)

14세미만법정대리인동의 (22조)

- 처리제한 -
민감정보 (23조)
고유식별정보 (24조)
주민등록번호 (24조의 2)

제3자 제공 (17조)

목적외이용·제공제한 (18조)

처리위탁 (26조)

국외이전 (17조)

영업양도·양수 (27조)
(민간)

안전조치 의무 (29조)

처리방침 (30조)
보호책임자 (31조)

개인정보유출 통지·신고 (3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32조)
(공공기관)

파기 (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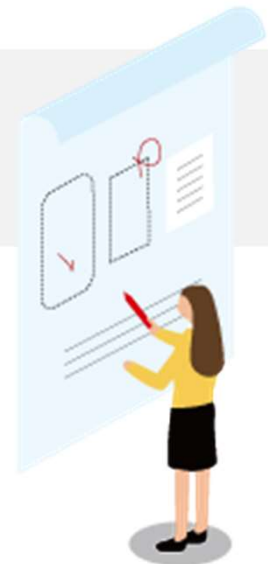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없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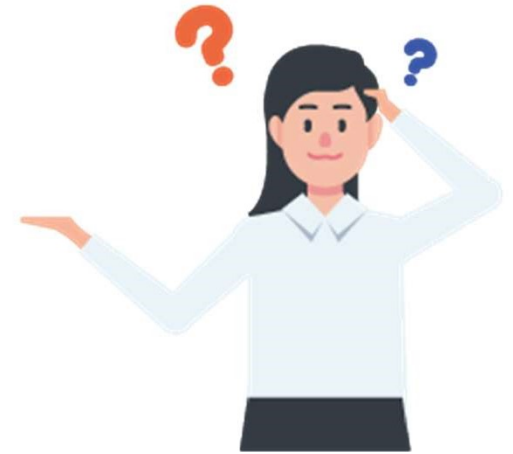
-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 5.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위반 시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

정부기관에서 정책홍보 퀴즈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참여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를 수집하면서
 동의 여부(예,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합니다.)에 대한 확인만
 요청해도 되나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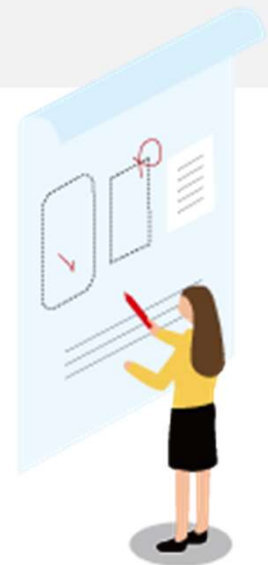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이벤트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득 동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고지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적법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없음!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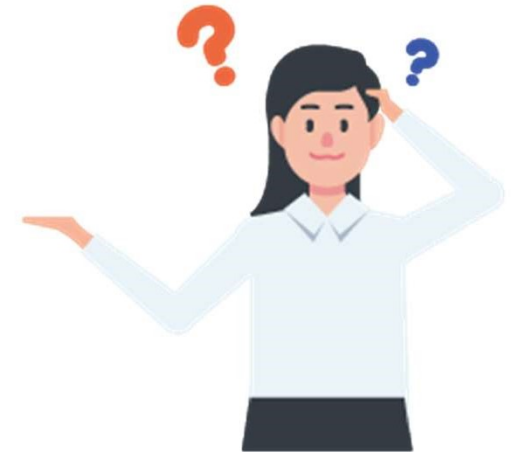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처리 근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에도 처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

-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 거부 가능
- ▶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수집이 허용될 수 있나요?



A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는 **선택정보로서 필수정보와 구분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없음!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2. 다음에 경우에 따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1. 법률의 특별한 규정

-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에 이용하도록 제공

2. 법령상 의무 준수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하려는 자의 강사명단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 의무
- ▶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른 소득지급자의 소득 귀속자의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등 이행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령·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사무 「주민등록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사무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해당 없음!

목적 외 이용·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아래 사항 중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만 해당

5.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불가능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7.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

1.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사례

-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 질문
-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관계자 등 자료 요구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록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에 자료제공 요구
- ▶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이 병역 이행 사항 확인·점검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료제공 요구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등

사례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례(공공기관만 해당)

- ▶ 경기도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하여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주차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서해 5도 주민의 화물선 이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선명, 출·입도지, 승선일) 제공받을 수 있음
- ▶ 강원도 삼척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른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집한 삼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만65세 이상 주민의 성명과 주소 이용 가능

제 공 하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외 필요
사항에 대한 제한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요청

요 청



제 공 받는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공공기관 이행사항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관련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 관리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0조)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3일 이내)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 요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함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연락처 등)가 없다면 적용 제외 가능

- ▶ 고지의무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고지 방법 및 시기

-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제공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 ▶ 고지하였다는 사실, 알린 시기, 알린 방법을 개인정보 파기할 때까지 보관 관리

- ▶ 단, 범죄수사, 공소 제기·유지, 형·감호 집행, 교정·보호·보안관찰 처분, 출입국 관리사항 등의 개인정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 시에는 적용 예외

**Q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교수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물DB를
만드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A

이른바 '공개된 개인 정보' 는 당초 공개된 목적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창회 명부라면 해당 회원들의 상호 연락 및 친목 도모에만 이용될 수 있으며,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마케팅 행위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교수의 개인정보는 학술연구와 자문, 저술활동, 기고 등에 쓰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정보주체가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

- ▶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보존 가능



- ▶ 개인정보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파기 방법

-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 ▶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파기 절차

-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

동의 받는 방법 (제22조)

- ▶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민감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
- ▶ 홍보나 마케팅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 할 때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금지(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동의서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 ▶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등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 개인정보 중 다음의 사항
 -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표시 방법 ★

- ▶ 글씨는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할 것
- ▶ 다른 색의 글씨,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 ▶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할 것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예시)

본교는 2015년 ○월 ○○일 실시할 예정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학생의 성명, 학년, 반, 전화번호, 학부모 성명, 전화번호	현장체험학습 운영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명, 감염 기간, 질병 감염 경로	학생의 위생 관리	1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 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00군부대	현장체험학습장 출입자 신분 확인	학생의 성명, 학년, 반, 전화번호	1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사관리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반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 구체적으로 처리근거**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함 (제24조2)



조사대상

- ▶ 공공기관
- ▶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조사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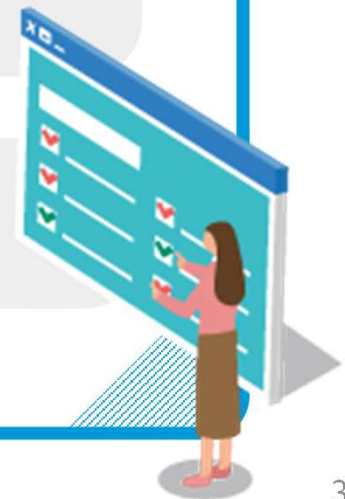
- ▶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방법

- ▶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
※ 결과 확인 후 필요 시 현장점검

수행기관

-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 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가입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 ▶ (예) I-PIN, 휴대폰,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

위반 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 채용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데 적법한 것인가요?



A

채용지원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이 결정된 후 법령을 근거로 주민등록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수집이 가능합니다.

입사지원서 접수,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 전형과정에서는 해당 전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처리 근거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 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므로 채용 전형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결정 후 사용자가 근로자 의무 보험 또는 국민연금 등을 처리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제공해야 하므로 수집가능하고, 이때는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 또는 보호하는 시설에는 적용 제외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 사용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있도록 안내판 설치 및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

Q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곳마다 설치해야 하나요?



A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출입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표기)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문서화

문서에 포함될 내용

- ①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④ 재위탁 제한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⑥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의 감독
- ⑦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



- ▶ 위탁하는 업무 내용,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 **홍보나 판매 권유** 업무 위탁 시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탁자 교육, 감독**
- ▶ 수탁자는 위탁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정보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인가요?



A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Ⅲ.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함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위반 시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주요내용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 내부 관리계획 수립
- ▶ 이행실태 연 1회 이상 점검·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 ▶ 인사이동시 접근권한 지체없이 변경·말소
- ▶ 권한부여·변경·말소기록 내역 3년간 보관
- ▶ 개인별 사용자 계정 발급, 계정 공유 금지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통제

- ▶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장비 설치·운영
- ▶ 인터넷 등 외부에서 접속시 안전한 수단 적용
- 가상사설망(VPN), 인증서(PKI),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 ▶ 미이용 시 시스템 자동 접속차단(로그아웃)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등

-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화
- 전송·저장 시 암호화,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등
-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 월 1회 이상 점검
- ▶ 물리적 안전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10.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 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

업 무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참고

공공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 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무직공무원을 장 (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기타 국가기관(소속 기관 포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장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각급 학교	➤	행정사무 총괄자
기타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장

민간

사업주(대표자) 또는 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담당부서장)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 시행, 필요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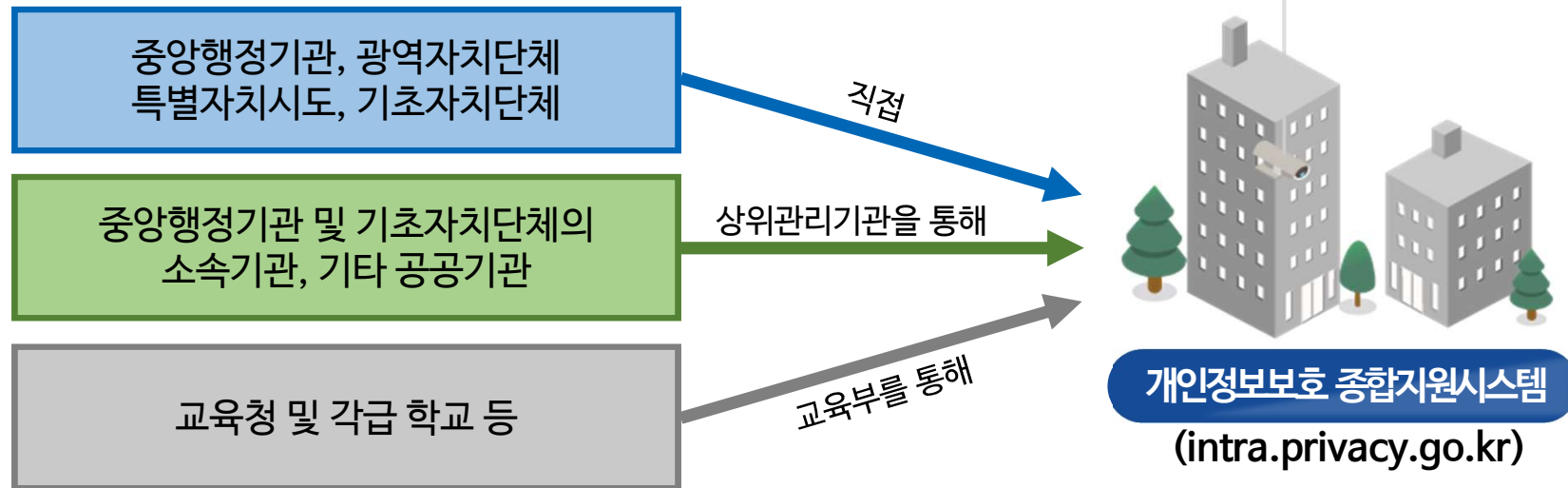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 등록해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유기간, 반복적인 제공의 경우 제공받는 자
-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개인정보 처리 업무 담당 부서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와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사유

등록 예외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 조세범처벌법,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함
- ▶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부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 인증의 기대 효과

- 체계적·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가능
-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효율적 대응 가능
- 경영진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고객의 신뢰 향상

☑ 인증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증 유효기관 : 3년

☑ 신청기관 유형 :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기업 유형으로 인증

☑ 인증심사 기준 : 3개 영역 102개 인증기준

※ 인증기준 방법·절차 등은 고시 참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 시행 : 2018년 11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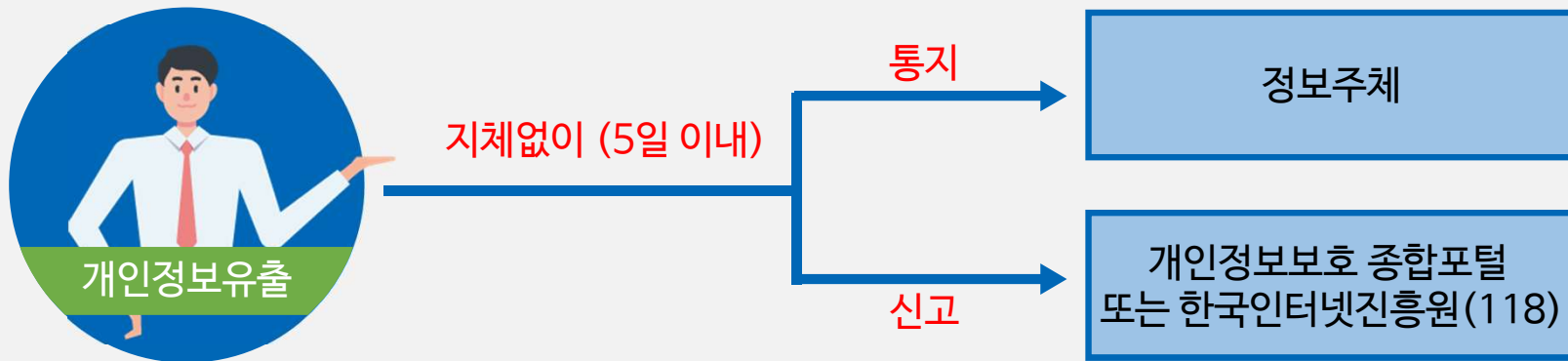


영향평가 수행대상

-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동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34조)



통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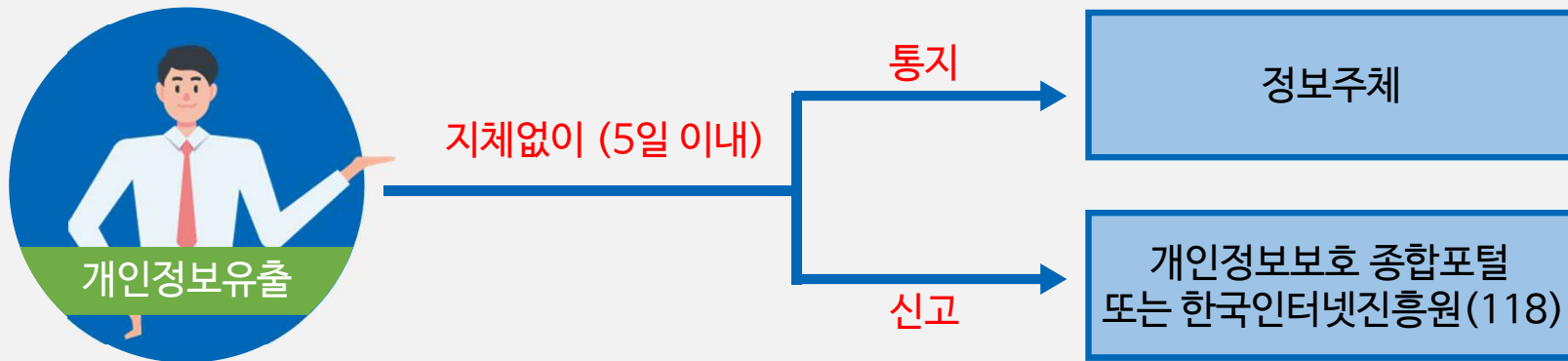
신고방법

통지대상	➤ 1건이라도 개인정보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
통지시기	➤ 5일 이내
통지방법	➤ 개별통지 - 서면, 전자우편, 전화, 팩스, 문자전송 등 ※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
통지내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 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통지 및 전문기관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함**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제34조)



통지방법

신고 방법

신고대상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기관	➤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전문기관)
신고시기	➤ 5일 이내
신고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전화(118), 전자우편(118@kisa.or.kr)
신고내용	➤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및 조치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 통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함

V.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가능**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열람 등 요구도 가능

- ▶ 정보주체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함

- ①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의 행사 방법과 절차 간소화

-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해당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대표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

- ▶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10일 이내**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을 통한 열람요구 처리 필요
- ▶ 기간내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 가능**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 제한·거절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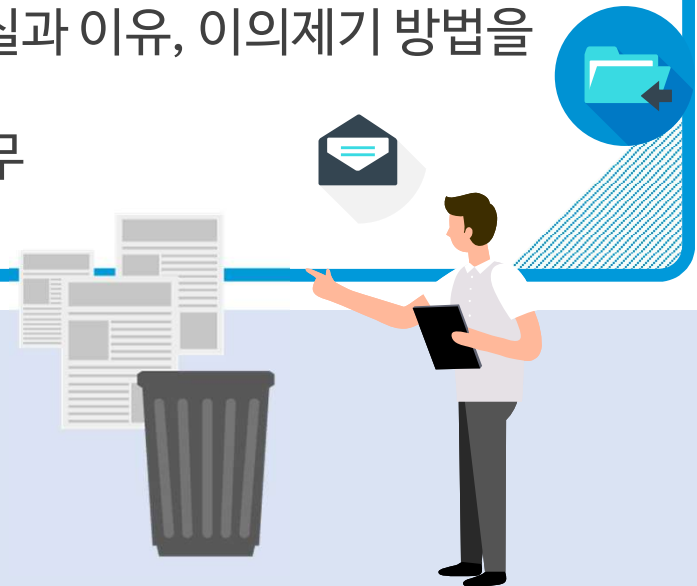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조치사실 통지 의무
-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 방법을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 의무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가능**

※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인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정지 요구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조치사실 통지 의무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 이의제기방법을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 의무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PRIVACY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함께합니다.
정보통신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봉이 되고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개선권고
- 행정처분 의뢰
- 수사 의뢰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개인정보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제도개선권고
- 손해배상 권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39조)와 법정 손해배상제도(제39조의2) ”

구 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정 손해배상제도
적용 요건	처리자의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동의 없이 활용하여 피해 발생	처리자의 고의·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입증 책임	처리자가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액은 피해자가 입증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입증책임 면제
구제 범위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모두 포함	사실상 피해 입증이 어려운 정신적 피해
배상 규모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 배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적용 시기	2016년 7월 25일 이후 유출사고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

참고

1.수집

2.이용

3.제공

4.관리
(보관)

5.파기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처리 가능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 동의 받을 때는 고지의무 사항 준수

- 당초 수집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제공 금지
-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반드시 문서로 위탁
- 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 철저

-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연 1회 이상 점검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실시, 접속기록 보관·점검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보관
- 개인정보파일 현황 정기적 파악 및 등록

- 보유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즉시 파기
-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분리 보관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2020. 8. 5. 시행)



1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 정비**

2



데이터 이용
활성화

- ▶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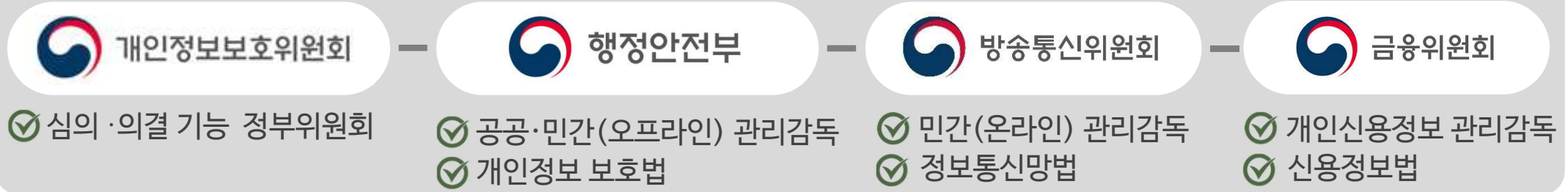
개인정보처리자
책임성 강화

- ▶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 부과**

①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분산



“효율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보호위원회로 통합·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각부처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통합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감독체계 구축

2 정보통신망법과의 통합을 통한 법령 일원화



- ▶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간 적용 관계 등 혼란 야기
-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사업하는 경우 두 법 모두 적용되는 등 유사 중복규제 논란 제기
- ▶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유사 규정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하고
정보통신망법의 고유한 규정은 보호법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이관

흡수·통합

- 동의받는 방법
- 인증
- 민감 정보의 처리
- 열람·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손해배상
- 영업의 양도·양수
- 법정 손해배상
- 안전조치 의무
- 금지 행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고발

기존규정개정

- 개인정보 제공
- 목적 외 이용 제한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법정대리인 권리 행사
- 비밀 유지



특례이관

- 수집·이용
- 노출 개인정보 삭제·차단
- 유출통지 및 신고
- 국내대리인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국외이전
- 동의철회
- 상호주의
- 이용내역통지
- 과징금
- 손해배상 보험
- 방송사업자 준용

1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 ▶ 개인정보 판단기준 보완 :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구체화
- ▶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로 명확화
 - ※ 익명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기 존

제2조(정의) 1호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 정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①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 ②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원본) 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홍길남	67년1월3일	010-9999-3333	055-747-0088	055-2345-6789	경남 창원시 마산구 합포동 123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4,567,900원	45,896,789원

(잘못 된) 가명 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삭제	- *삭제	ddkslsf93 *암호화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 *범주화	국회의원	배우자, 아들1	4,567,900원	45,896,789원

※ ‘경남 창원시 마산에 주소를 둔 국회의원’이라는 극소수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로 식별 가능

(제대로 된) 가명 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삭제	- *삭제	ddkslsf93 *암호화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 *범주화	- *삭제	배우자, 아들1	4,567,900원	45,896,789원

※ 사실 상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 불가능, 다만 핸드폰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면 복원 가능하므로 가명정보에 해당

익명 정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직장전화	자택전화	주소	직업	가족	예금 평균잔액	대출액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경남 창원시 마산 *범주화	- *삭제	가족 2명	400~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음

2 데이터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

제15조, 제17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
이용·제공 가능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최초 수집 시 정해진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이용 가능

목적 일부 변경 시
정보주체로부터
추가 동의 획득 필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제공 가능

가명정보의 이용·제공 범위 확대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

제18조제2항제4호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

제28조의2제1항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개인정보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산학 연구
및 민간연구 등의
포함 여부 논란

추가정보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新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와
상업 목적의 통계 작성 포함

3 데이터 결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28조의3)

데이터 결합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부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 ▶ 기업 내부의 가명정보는 자체적으로 결합(제28조의2)하도록 하되,
- ▶ 서로 다른 기업간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제28조의3 제1항)
 - ※ 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 ▶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할 경우 가명 또는 익명 조치 후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 가능(제28조의3 제2항)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및 형사벌 부과
- ▶ **재식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및 형사벌 부과



가명정보 안전조치 의무 (제28조의4)

- ▶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보관 관리
-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 ▶ 가명정보 처리 기록을 작성·보관

위반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 의무 (제28조의5)

-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 처리 불가
-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처리 중지, 회수·파기

위반 시 ➡ 4억원 이하 또는 전체매출 3% 이하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령

▶ 입법예고 후 관계 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

※ 입법예고(3.31.~5.11.) → 규제심사(30일) → 법제처 심사(30일) → 차관·국무회의(15일) → 재가·공포(10일)

가명정보

- ▶ 결합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 ▶ 가명정보 결합·반출 기준
- ▶ 관리·감독 기준
- ▶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재식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등

특례신설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 정보처리 특례 신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으로 이관

기타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 가능한 기준 등 법 위임사항

행정규칙

▶ 고시 등 행정규칙은 4월 중 입안 완료 → 5월 중 행정예고 추진

※ 행정예고(20일) → 규제심사(30일) → 법제처 협의(30일) → 발령(10일)

- ▶ 행정규칙(고시)은 데이터 결합의 세부 절차 등을 담은 고시 신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고시 통합 정비를 병행

질의문답

